
**[제16-1호]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제16-2호]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제16-3호]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제16-4호]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안)

2013. 8.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 16 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

2013. 8.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 목 차

[제16-1호]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1
---	---

[제16-2호]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19
--------------------------------------	----

[제16-3호]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41
--------------------------------	----

[제16-4호]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안]	119
-------------------------------	-----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안)

2013. 8. 2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추진 배경	5
II . 사업 추진절차 개선	6
1. 사업발굴 과정의 협력 강화	6
2. 사업선정 과정의 내실화	11
3. 사업집행 · 평가 과정의 협력 강화	13
III . 협업 촉진기반 강화	14
1. 상시 조정체계 마련	14
2. 소통 및 협업유인 강화	15
3. 패키지형 사업 성공사례 발굴 · 확산	16
4.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강화	17
IV . 기관별 추진과제	18

I. 추진 배경

- 그간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10년)을 계기로 체계적 ODA 추진을 위한 거시적 기본틀을 단기간에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구축, 국가적 추진전략* 마련, ODA 통합평가 및 통계시스템 구축 등
- * ODA 선진화방안('10.10), 제1차 기본계획('10.12), 한국형 ODA모델('12.9) 등
- 향후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가능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내실있게 OD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사업 내용) 수원국의 요청과 우리의 비교우위·강점분야를 결합함으로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 (추진 방식) 국내기관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성과를 제고
- 그러나, 최근 ODA 참여기관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관간 소통 부족과 독자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비효율과 혼란 발생 우려
 - 또한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패키지화하거나,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결합하는 시스템도 미흡

⇒ 현행 ODA 사업의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기관간 협업 촉진 기반을 강화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Ⅱ. 사업 추진절차 개선

1 사업발굴 과정의 협력 강화

1.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 도입

□ 현 황

- 현재 우리나라의 ODA 사업추진 절차는 선정 단계(n-1년)에서의 사업조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발굴 단계(n-2년)의 기관간 정보공유·협력 시스템이 미비하고, 사업간 실질적 연계도 제약
 - (발굴 단계(n-2년)) 기관별 예비사업계획안이 공유되지 않아, 유사사업을 중복 추진하거나, 사업간 연계방안 협의 곤란
 - (선정 단계(n-1년)) 이 시기는 사업내용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조정보다는 소극적 단순연계 등에 그치는 실정
- * 유상원조 사업의 경우, 평균 사업개시 18.9개월 전에 승인이 완료되므로, 사업 전년도(n-1년)에는 무상원조 사업과의 실질적 연계가 제약
- 최근 ODA에 대한 기관별 관심 증가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급조된 부실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

□ 개선방안

-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기관간 예비사업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방지 및 사업간 패키지 연계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내용이 미흡한 사업은 검토 후 보완기회 부여

- (n-2년 상반기) 각 기관이 수원국과 협의 중이거나 구상중인 유·무상 예비사업계획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취합·공유

* 발굴된 예비사업계획안은 「ODA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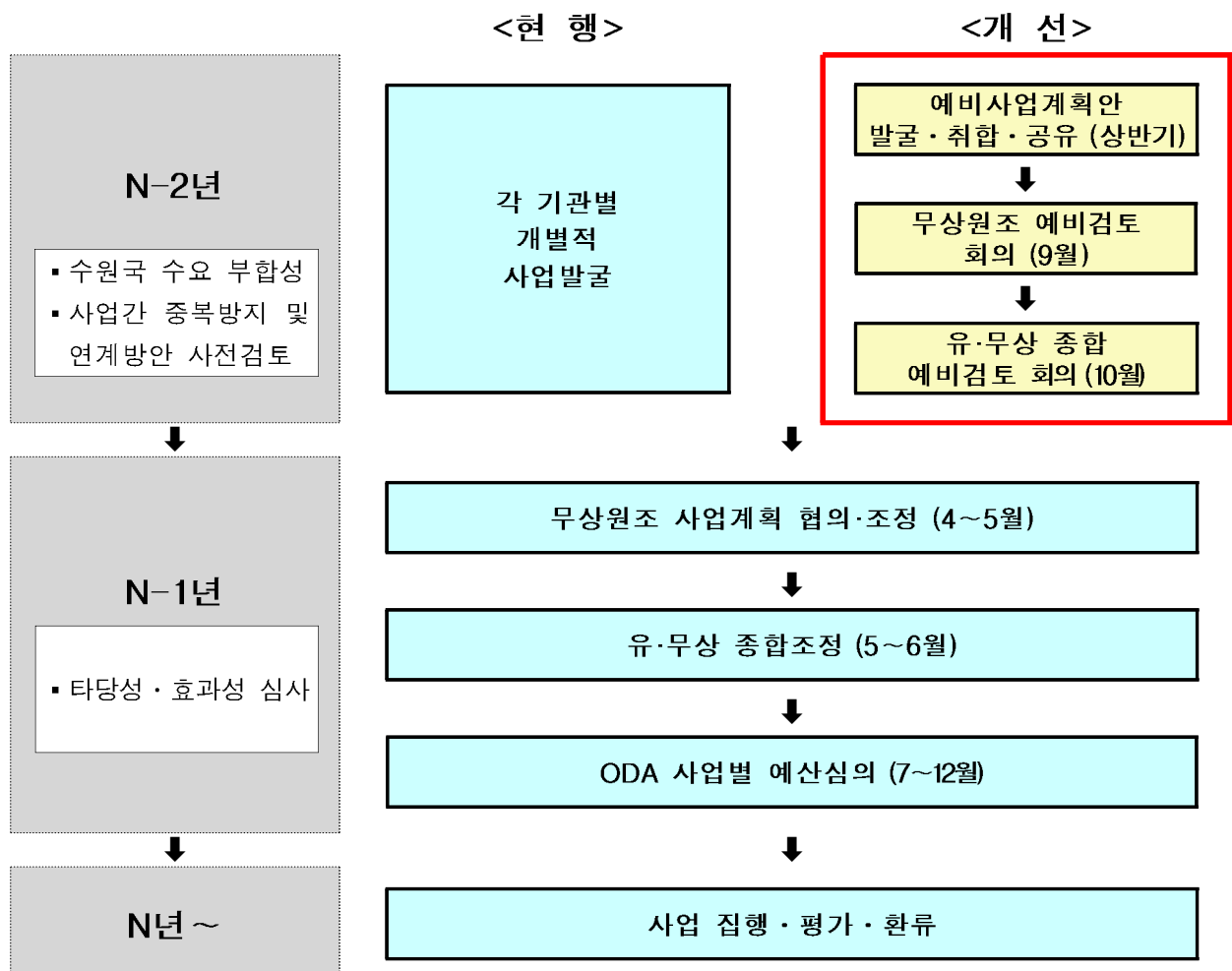
** 유상원조의 경우, 신규승인 추진사업 목록을 매년 초에 무상기관과 공유

- (n-2년 하반기) 관계기관 예비검토회의(9~10월)를 개최하여 사업간 중복방지 및 패키지 연계방안 등을 검토·협의

- (n-1년 상반기) 각 기관은 n-2년 예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n-1년 본격적인 사업조정 실시(4~6월)

○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보완 후 '14년부터 본격 시행

< 사업추진 일정표(예시) >



2. 수원국 수요반영 시스템 개선

□ 현 황

- 효과적인 ODA가 되기 위해서는 국별협력전략(CPS)*을 토대로 수원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나, 공여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공여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상당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수원국-공여국 간 협의된 종합지원전략

- 일부 ODA 사업은 수원총괄기관과의 협의 없이 수원국 개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비효율 및 혼란 발생

* 수원총괄기관의 공식 요청이 아닌 경우, 수원국 개발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고, 수원국 내에서도 혼란을 초래

- 공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발굴한 사업의 수원국 수요 부합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차원의 검토 시스템도 미흡

* 발굴한 사업이 수원국 수요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 ODA 시행계획을 마련·제출하는 경우도 발생

-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ODA 참여기회 확대 및 우수 청년인력 진출 등에도 기여하는 ‘win-win형 사업’ 발굴은 미흡

□ 개선방안

- (수원국 공식요청 기반) 수원총괄기관의 공식 요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추진절차 정비

* 외교부는 각 수원국별 수원총괄기관 목록을 작성, 시행기관과 공유

- 재외공관은 수원총괄기관 등 수원국의 요청사항 발생시, 외교부 본부를 통해 국내 시행기관과 공유
- 시행기관은 공식 요청사항에 기초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 개별부처의 요청사업은 재외공관과 공유하고 추진
- 주관기관이 사업발굴을 위해 수원국 정부와 정책협의를 시, 시행기관에 사전 공지하고 공동으로 정책협의를 실시

- (CPS 중심 발굴·협약) 수원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국별 협력전략(CPS)에 기초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과 사업 목록(안) 협의회 CPS를 적극 활용

* 「n-2년 예비검토」 및 「n-1년 사업조정」 시 CPS 반영 여부를 중점 검토

- (현장 중심의 수요검토 강화) 재외공관은 시행기관이 발굴한 유·무상 사업에 대해 예비검토 단계(n-2년)에서 의견 제시

*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효과성 제고방안, △수원국의 사업 관심도 등에 대하여 필요시 검토의견 제시

- (win-win형 사업모델 발굴) 수원국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

3. 재외공관-국내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 현 황

- 다양한 ODA 시행기관 참여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협의시 재외공관과의 정보공유가 중요
- 그러나 일부 기관은 수원국과의 사업추진 협의시 재외공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혼란이 발생

□ 개선방안

-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외공관-국내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시행기관) 사업수행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사업발굴 초기단계부터 재외공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
 - 특히, 수원국 방문시에는 방문계획 및 결과를 재외공관과 공유
- (재외공관) 시행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관련 정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
 - 특히, ODA 관련 현지 회의결과를 시행기관과 공유

- 각 ODA 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이행 독려

2 사업선정 과정의 내실화

1. ODA 사업 공통심사기준 마련·시행

□ 현 황

- ODA 사업조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제시되지 않거나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 야기

* 무상 1차 조정(외교부) □ → 유·무상 종합조정(국조실) → 예산편성(기재부 예산실)
유상 1차 조정(기재부)

- 그간 분절화 극복을 위한 **중복 해소 및 연계 강화** 심사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부적합 사업의 **배제**에는 소홀

□ 개선방안

- ODA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사항*** 위주로 **공통심사기준 마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에서 심사기준 추출

< ODA사업 공통심사기준(안) >

- 수원국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수원국 수요 반영 여부
- 우리나라 ODA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교우위 분야 여부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여부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등 ODA 추진절차 이행 여부
- 신규사업간 또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중복 여부
- 일회성 또는 전시성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동 심사기준을 '15년 사업계획안 심사('14년)부터 본격 적용
 - 특히, △수원국의 ODA 수요를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은 배제

* 배제된 사업은 수원국과의 협의 등 충분한 보완을 거쳐 차년도에 재신청

2. 사업조정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 현 황

- 현재 국조실과 기재부(예산실)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조정 결과를 가급적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다소 미흡
- 작년의 경우,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 제출(6월말) 이후에 사업조정이 완료(7월초)됨에 따라, 사업조정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데 일부 애로
 - * 그 결과 사업심사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거나, 사업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되는 사례 일부 발생

□ 개선방안

- 사업조정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6월초), 각 기관은 사업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토록 조치
- 부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계획은 예산요구서 제출을 금지
 - *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보완 조치
-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국조실과 기재부(예산실)간의 업무협조를 강화
- 사업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에서 제외
 - *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조치

3 사업집행 · 평가 과정의 협력 강화

1. 사업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

□ 현 황

- 기관별 · 국가별 ODA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ODA 모니터링 시스템’(11.12월 구축)의 기관별 활용도가 저조하고, 시스템 이용권한이 재외공관에는 부여되지 않아 지원에 제약

□ 개선방안

- ‘ODA 모니터링 시스템’의 접근성 ·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스템 이용권한을 재외공관에도 부여*

2. ODA 개선을 위한 평가 협업활동 강화

□ 현 황

- KOICA · EDCF 등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들의 경우, 사업 담당자가 자체평가도 담당하여,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
- 평가 전담부서를 갖춘 KOICA · EDCF의 ODA 평가기법을 확산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부족

□ 개선방안

-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KOICA · EDCF의 타 기관 평가기법 자문 등 실시
- 공동평가 등 평가 협업을 위한 상호참여 확대

Ⅲ. 협업 촉진기반 강화

1 상시 조정체계 마련

□ 현 황

- 업무영역 중첩 구조로 인해 기관간 이견이 수시로 발생하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조정하는 것은 곤란

* 총리(위원장), 장관급 17인,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ODA 정책 방향과 전략, 연간 시행계획 등을 심의(연평균 3회 개최)

□ 개선방안

- 국조실 주관 「ODA 협업회의(국장급)」를 운영하여, 적시에 이견사항 조정 및 협업 애로요인 해소

* (주제)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운영)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조실장 주재 관계 부처 차관회의(또는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견 조정

- 유·무상 주관기관인 기재부-외교부간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연계사업 발굴, 주요현안 논의 등을 실시

*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국조실 주관 협업회의에서 논의·조정

< 업무영역 중첩 관련 >

- KOICA가 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개별부처도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분야 ODA 사업을 추진중

* 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등

- 중장기적으로 기관별 업무영역 정립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국조실 주관 협업회의를 통해 사안별로 기관별 역할을 조정

2 소통 및 협업유인 강화

□ 현 황

- 기관별로 ODA에 대한 강조점 등이 다소 상이함에도, 상호 이해를 위한 소통과 교류 기회가 부족

* (기재부) 대외경제정책 측면을 강조, 유상원조 확대 지지
(외교부) 외교정책 또는 공공외교 측면을 강조, 무상원조 확대 지지

- 협업을 통해 ODA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유인 수단이 부족

□ 개선방안

- 관계기관 인사교류 및 해외 현지사무소 공동근무 실시

- 기재부-외교부, EDCF-KOICA 간 교류직위를 지정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이해 확대 및 원활한 업무협조 도모

* 기재부-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인사교류 既 시행('13.6월)

- EDCF-KOICA간 해외 현지사무소 공동근무(one-roof)를 통해 ODA 사업현장에서의 유·무상간 교류·연계 강화

* 양 기관 현지사무소가 기 개설된 9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스리랑카·미얀마·우즈벡·탄자니아·콜롬비아)부터 조속 추진

- 전국 ODA 담당자 합동 정례워크숍 개최 (연 2회)

- 협업 우수사례를 위원회에서 발표·공유하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진

3 패키지형 사업 성공사례 발굴 · 확산

□ 현 황

- 그간 각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된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그 사례가 비교적 적고, 이를 장려하는 노력도 미흡

□ 개선방안

-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ODA 워크숍 ·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공유하여 협업 촉진기제로 활용

< 참고 : 패키지형 연계사업 우수 사례 >

① 동일분야 연계 :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 병원 건립



② 다분야 연계 :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



4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강화

□ 현 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각 기관의 이해관계 등에 부딪쳐 미이행·지연되어, 효과적인 협업 추진에 장애

* (예시) 모자보건 ODA 통합추진전략 수립, KOICA·EDCF 교류 활성화 등

** '12.8월 1차 이행점검시 40%, '13.2월 2차 이행점검시 25%가 미이행

□ 개선방안

-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된 사항은 해당부처 위원이 위원회에서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

IV. 기관별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일정	소관 (협조)
① 사업발굴 과정의 협력 강화			
①-1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 도입	'13.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각 부처)
①-2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시행	'13.下	국조실 (외교부)
② 사업선정 과정의 내실화			
②-1	ODA 공통 심사기준 마련	계속	국조실·기재부·외교부
②-2	사업조정과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13.下	국조실·기재부 (각 부처)
③ 사업집행·평가 과정의 협력 강화			
③-1	ODA 평가워크숍 개최	계속	국조실
③-2	평가기법 자문, 공동평가 등 실시	'14.下	KOICA·EDCF
④ 상시 조정체계 마련			
④-1	「ODA 협업회의」 운영	계속	국조실
④-2	주관기관 정례 협의채널 운영	계속	기재부·외교부
⑤ 소통 및 협업유인 강화			
⑤-1	관계기관 인사교류 실시	'13.下	KOICA·EDCF
⑤-2	해외 현지사무소 공동근무 실시	'14.上	KOICA·EDCF
⑤-3	ODA 합동워크숍 개최	계속	국조실·기재부·외교부

2012년 개발협력 정책 · 집행평가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2013. 8. 2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OECD/DAC Peer Review의 의의	23
II . Peer Review 결과 및 주요 권고사항	24
III .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25
1. ODA 전략 재정비	26
2. ODA 자원 확대 및 적정 배분	30
3. ODA 통합추진체계 관리 강화	33
4. ODA 책무성 및 일관성 확보	36
IV . 기관별 추진과제	38
첨부 : Peer Review 권고사항 목록	39

I. OECD/DAC Peer Review의 의의

□ Peer Review 개요

- (의의) OECD 개발원조위(DAC) 회원국의 ODA 정책 및 집행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

* 4~5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약 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 (성격)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없으나, 회원국은 이를 객관적 평가 계기로 삼아 ODA 정책 개선을 추진할 자발적 의무 부담

* DAC 회원국들은 Peer Review의 권고사항을 존중하면서, 자국의 여건에 따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 2008년 Special Peer Review 활용결과 >

- (개요) '08년 DAC 가입을 위한 특별 동료검토(Special Peer Review) 결과 권고사항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적·제도적 추진기반 구축
- (주요 개선사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국조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 ODA 선진화방안 수립,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등

□ 우리나라의 '12년 Peer Review 수검

- (의의) DAC 가입('10년) 이후 받은 최초의 Peer Review로서, 우리나라 ODA의 현주소와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

- (수검 경과) 제11차 위원회('11.12월)에서 수검준비계획을 보고한 이후, 범정부 수검준비반을 구성하여 1년여에 걸쳐 적극 대응한 결과, 금년 1월에 성공적으로 수검 완료

- (향후 계획) DAC에서는 '15년 중반기 경에 Peer Review에 대한 중기검토(Mid-term Review)를 실시하여 권고사항 이행점검 예정

II. Peer Review 결과 및 주요 권고사항

□ Peer Review 보고서의 구성

- 보고서는 Part I (주요 관찰결과 및 권고사항)과 Part II(사무국 보고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Part I에 명시적 권고사항이 수록
 - (Part I) Part II에서 권고사항을 추출한 것으로, 공식 검토대상
 - * 명시적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기검토 및 차기 Peer Review에서 점검
 - (Part II) DAC 사무국의 사실관계 보고서로, Part I의 기초 제공

□ Peer Review의 주요 권고사항

- OECD/DAC은 한국이 DAC 가입('10년) 이후, 지난 2년간 이루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ODA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고

* 기본법 제정 등 추진체계 정비, 국제논의에 주도적 역할 등 긍정 평가

〈 주요 권고사항 〉

- (전략체계) 현재의 견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위에 개발협력전략 보완
- (투명성·책무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규모·배분) '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달성, 양·다자 및 유·무상 간 적절한 균형 유지, 유상원조시 취약국·고채무국 상황 고려
- (조직·관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유·무상관계기관협의회 및 ODA 현지협의체의 권한 강화, ODA 인적자원 강화
- (평가) 평가소위원회의 독립성과 평가절차 강화, 모니터링 및 환류 개선
- (원조효과성) 원조효과성 원칙을 한국의 원조절차·전략에 반영하고, 원조의 비구속화 등 비교적 부진한 부문의 집중 개선
- (인도적 지원)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전략 및 정책 수립

Ⅲ.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기 본 추 진 방 향

① 활용 목적

- 우리 ODA 시스템의 선진화 및 향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수립을 위한 선행적 검토 계기로 활용

'08년	'10년	'12년	'15년	'17년	'20년
Special Peer Review	제1차 기본 계획 수립	Peer Review	제2차 기본 계획 수립	Peer Review	제3차 기본 계획 수립

② 활용 과제

- Peer Review의 명시적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③ 활용 방식

- 과제별 추진여건과 소요기간, 기존 과제와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	새롭게 권고된 과제		③ 기존 추진과제
	① 단기 추진과제	②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방안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전반적 개선방향과 추진일정 마련	기존의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해당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채무국 등에 대한 원조수단 개선 ▲ 위원회 역할 강화 ▲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체계 보완 ▲ 인도지원 전략 수립 ▲ 정책일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원조 전략 수립 ▲ 원조효과성 원칙 반영 ▲ 규모 및 배분 ▲ 인적자원 강화 ▲ 평가절차 강화 ▲ 대국민 정보제공

1 ODA 전략 재정비

1. ODA 전략체계 보완 (중장기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개발협력 전략체계에 중점분야(thematic focus areas)별로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목적·기대되는 결과 등을 명시
- ◆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완성 및 개선

□ 현 황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유·무상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였으나, 목표·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상황
- (중점협력국) 타 공여국과 비교시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26개국)하고, 최빈국 비중이 저조(11개국, 42%)
- (국가협력전략) 3개 내외의 중점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목표·기대결과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성과관리 및 활용이 미흡

□ 추진방안

- (기본계획 개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시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중점지원분야별로 전략목표·우선순위·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15년)
- (중점협력국 조정)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점협력국의 수를 축소하고, 최빈국 비중 확대 검토('14년)
- (국가협력전략 개선) CPS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CPS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4년 이후 수립되는 CPS에 적용('14년)

* (예시)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평가를 포함, 우선순위·목적 등의 명시 등

2. 종합적 다자원조전략 수립 (기존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종합적인 다자원조전략의 수립 및 공표

□ 현 황

- (규모) '13년 다자원조 예산은 약 6,618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0%를 차지

* UN 및 기타기구 : 약 2,658억원, 국제금융기구 : 약 3,960억원

- (지원 체제) 20여개 기관이 80여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분산된 지원체제와 유사 소규모 기금 중복 등으로 지원 효과가 저조
- (다자 전략) 그간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온 양자원조에 비해, 다자원조의 경우에는 아직 종합적인 추진전략이 부재

□ 추진방안

- (사전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국조실)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 연구('13.5~10), (외교부) KOICA 주요 다자협력 기구 적정성 평가 및 다자협력 운영체계 조사('12.12~'13.7)

- (종합전략 마련) 금년 하반기까지 다자원조 전반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시 활용

* (주요내용 예시) △다자원조의 목표 및 기본방향, △재원 배분방향, △중점 지원분야, △사후관리 방안 등

3. 범정부적 인도적 지원전략 수립 (중장기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전략 및 정책 수립
- ◆ 지원 대상 · 항목 · 지역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및 공유
- ◆ 양자(현물)원조의 효과성 · 적절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 마련
- ◆ 결과 보고와 학습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

□ 현 황

- (지원 전략)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나, 타 분야에 비해 아직 종합적인 지원전략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
- (평가 · 보고) 인도적 지원의 성과 평가 및 지원 결과의 보고 · 공개 시스템 보완 필요

□ 추진 방안

- (종합전략 수립) 인도적 지원의 체계적 수행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종합적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14년)
 - * (주요내용 예시) △전략적 비전 및 목표, △재원 배분방향, △지원 범위, △지원대상 및 기준, △사후관리 방안, △NGO와의 협력방안 등
- (지원수단 검토장치 마련) 지원수단 선택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결과 및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장치 마련('14년)
 - * (지원수단 선택기준 예시) △재난피해 상황, △피해국 지원 요청 내용, △국제사회 지원현황, △우리측 지원역량, △현지 치안 및 접근성 등
-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인도적 지원 관련 공식 웹사이트 (humanitarian.koica.go.kr, '13.4월 개설)를 정비하여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긴급구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활용

4. 원조효과성 원칙을 ODA 전략에 반영 (기존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원조효과성 원칙을 모든 개발협력 전략과 원조관리 절차에 반영
- ◆ 성과가 저조한 부문(원조의 비구속화, 프로그램형 접근방식 확대, 원조의 중기 예측가능성 제고, 개도국의 공공 재정관리체계 활용)의 집중 개선

□ 현 황

- (파리선언 이행결과*) '07년과 비교시 공여국에 적용되는 10개 지표 중 대부분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타 공여국에 비해 성과가 저조

* 국제사회는 '05년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해 12개 지표로 구성된 「파리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11년에 5년간의 이행실적을 평가

** 수원국의 공공 재정관리체계 활용, 원조의 비구속화 등

- (부산총회 이행추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11월)에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다양한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출범
 - 우리나라는 부산총회 후속조치로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계획 T/F」를 구성('12.10월)하여 지표별 이행계획 수립 중

□ 추진방안

-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계획 수립) 금년중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지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이행계획 수립을 완료
- (원조 전략·절차에 반영) 지표별 이행계획의 내용을 연도별 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 등 우리나라 원조전략·절차에 반영('14년)

2 ODA 자원 확대 및 적정 배분

1. ODA 규모 및 배분비율 (기존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ODA 규모 확대 추세를 계속 유지하여 '15년 ODA/GNI 0.25% 제공 목표를 달성하고, 양·다자 및 유·무상 원조간 적절한 균형 유지

□ 현 황

- (ODA 규모) '13년 ODA 예산은 약 2.05조원으로서, 최근 연평균 20% 가량 지속 증가*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0.15% 수준

< ODA 규모 및 GNI 비율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예산)
ODA 총액(조원)	0.65	0.89	1.04	1.36	1.47	1.75	2.05
GNI 대비(%)	0.07	0.09	0.1	0.12	0.12	0.14	0.15

- (ODA 배분) '10년 이후 양자·다자 및 유상·무상 비율을 각각 70:30, 40:60 수준으로 지속 유지 중

< 양·다자 및 유·무상 비율 >

구 분	'11	'12	'13
양자 : 다자(예산)	69.1 : 30.9	71.0 : 29.0	69.8 : 30.2
유상 : 무상(순지출)	41.9 : 58.1	40.1 : 59.9	-

□ 추진방안

- (ODA 지속 확대) 국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되,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ODA 규모 지속 확대 노력
- (ODA 배분비율 유지) '15년까지 양·다자 및 유·무상 비율을 지속 유지하되, '16년 이후의 비율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

2. 고채무국·취약국·최빈국에 대한 원조수단 개선 (단기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취약국 및 고채무국(HIPC)에 대한 유·무상 비율을 신중히 진단하고, 유상원조 시 이들 수원국의 경제상황·재정구조 등을 고려
- ◆ 수원국의 개발 목표와 주인의식·수요 등을 반영한 원조수단 선택

□ 현 황

- (고채무국·취약국) 관련 국제기준*을 활용하여 유상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재정구조 등 검토를 위한 자체 기준은 미비

*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WB/IMF), Fragile States Principles(OECD) 등

- (최빈국) DAC의 최빈국지원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으나, 국가별 특성에 따른 유상원조 전략은 미비

* 개별 최빈국에 대한 양자지원액의 3년 평균 증여율이 86% 이상 또는 해당연도 모든 최빈국에 대한 양자지원액의 증여율이 매년 90% 이상

□ 추진방안

- (고채무국) IMF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과 공동진단을 실시('14년)하여, 향후 유상원조 및 유·무상 ODA 재원 배분에 활용
- (취약국) 국제 관련기준을 준용하여 「취약국 지원을 위한 EDCF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4년 이후 적용('13년)
- (최빈국) 개발 수요·잠재적 성장가능성·경협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성화된 유상원조 지원 전략' 마련('14년)
 - 동 전략에 따라 유상원조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높지 않은 최빈국은 유상원조 비중을 축소하고 무상원조 확대 추진

3. ODA 인적자원 강화 (기존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총리실·기재부·외교부 및 양대 시행기관의 인적자원 강화

□ 현 황

- (중앙행정기관) 국조실·기재부·외교부에 7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나('13.8월), ODA 확대에 따라 관리인력 보강 필요성 제기
 - * 국조실 13명, 기재부 27명, 외교부 36명
- (양대 시행기관) KOICA·EDCF에 41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13.8월), '15년까지 지속적 인력증원 추진 중
 - * EDCF 104명, KOICA 311명
- (현장 인력) KOICA는 44개국 103명, EDCF는 11개국 14명의 해외사무소 직원이 근무 중이며('13.8월), 최근 지속 증가 추세
 - 재외공관의 경우 ODA 전담인력은 없는 가운데, 최근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이 강조되면서 인력 보강 필요성 증대

□ 추진방안

- (기관별 인력 증원) 양대 시행기관은 '15년까지 계획된 인력 증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제2차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 분야에 대한 인력 보강을 검토('15년)
- (현장조직 확충) KOICA·EDCF는 '15년까지 현장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장사업 조율 및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ODA 담당인력 확충 검토('17년)

3 ODA 통합추진체계 관리 강화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 강화 (단기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획·예산 과정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강화

□ 현 황

- (기획 과정) 위원회는 ODA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의결된 사항이 적시에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
 - * 1차 이행점검('12.8월)시 40%, 2차 이행점검('13.2월)시 25%가 미이행·지연
- (예산 과정)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 사업계획 조정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은 다소 미흡
 - * 사업조정 결과 부적합 사업이나 사업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

□ 추진방안

- (위원회 이행력 담보)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 사항은 해당부처 위원이 위원회에서 직접 소명('13년)
- (예산연계 강화) 위원회 간사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ODA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조정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간 연계를 강화('13년)
 - 사업조정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 제외

2. 유·무상 관계기관협의회 및 현지협의체 기능 강화 (단기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유·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와 ODA 현지협의체의 기능 강화

□ 현 황

- (관계기관 협의회) 최근 참여기관 및 사업 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조정기능 강화 필요
- (현지협의체) 수원국의 수요 및 현장 중심의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강화 필요

□ 추진방안

- (유상 협의회) 분야별 EDCF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유·무상 사업간 연계를 강화('14년)
- (무상 협의회) 모든 무상원조 사업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1차적으로 협의·조정('14년)
 -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무상원조 예비사업을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1차적으로 검토·협의
- (현지협의체) 재외공관-국내기관 간 체계적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마련·시행('13년)
 - * (주요 내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기관은 수원국과의 협의 내용을 재외공관과 공유하고, 재외공관은 시행기관에 필요한 지원 제공
 - 기관별·수원국별 ODA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ODA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용권한을 재외공관에도 부여

3. ODA 평가절차 강화 (기존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평가소위원회의 독립성과 평가절차 강화,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개선, 평가역량 강화 및 현장조직에 평가권한 위임,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

□ 현 황

- (자체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소위 평가보다는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품질 제고가 주요 과제
 - (평가참여) KOICA · EDCF를 제외한 개별부처 등의 자체평가 참여도가 매우 저조('13년 5개부처 5건, '12년 3개부처 3건)
 - (독립성) 평가 발주기관(시행기관)에서 평가수행 과정에 개입하거나, 평가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장치 미흡
 - (환류) 일부 기관은 평가결과 후속조치 계획 마련이 미흡하고, 개선사항의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도 미흡

□ 추진방안

- (자체평가 대상 확대) 모든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을 의무화('14년)
- (평가지침 마련) 자체평가의 공정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윤리지침」 및 「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13년)
- (평가결과 환류 강화) 각 기관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계획을 제출하고('13년), 환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14년)

4 ODA 책무성 및 일관성 확보

1.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기존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주요 관계자들(국회·시민사회·NGO·일반국민 등)에게 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
- ◆ ODA 규모 증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강화

□ 현 황

- (정보 제공) 그간 ODA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공개되는 정보의 확대 요구 상존
- (홍보) ODA 규모 증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소 부족*하고, ODA 규모 대비 홍보예산의 비중도 비교적 미미('13년 0.13%)

* 여론조사 결과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지지도 : ('11) 73% → ('12) 66%

□ 추진방안

- (백서 발간) 금년중 ODA와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일반국민과 국회 및 ODA 관계자에게 제공
 - * (주요내용 예시) △ODA의 역사 및 국제사회 동향, △ODA 지원전략 및 지원현황, △ODA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 △과제 및 개선방향 등
- (홈페이지 개선) 정부 3.0 기조에 따라 ODA 통합 홈페이지 정비,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 확대('13년)
- (전략홍보 강화) ODA 확대에 대한 대국민 지지 확보를 위해 '14년 상반기까지 종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15년 이후 ODA 홍보 예산을 지속 확대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중장기 추진과제)

Peer Review 권고사항

-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의제 수립
- ◆ PCD 제고 및 조정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정치적 역량 확보
- ◆ 한국의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 강화

□ 현 황

- (국제 동향) ‘90년대 중반부터 개발협력 분야와 타 정책간의 정책일관성(PCD)이 논의되고 있으나, DAC 회원국의 PCD 추진 수준*은 각국 여건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

* 법적근거 유무, 공식 조정기구 유무, 모니터링 기관 유무 등

- (우리나라 현황) 기존 정책문서*에서 PCD 추진을 위한 방침을 선언하였으나, 법적 근거나 조정체계 등은 갖추지 않은 상황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12)

□ 추진방안

- (정책기반 마련) 국내 정책간 비일관성 사례 분석 및 시범과제 추진* 등을 통해 향후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14년)

* (예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PCD 친화적인 추진 등

- (추진체계 구축) 연구용역 및 시범과제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범정부적 추진계획 마련 및 조정체계 정비 등 추진(’15년)

- (정부 의제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시 PCD 추진방향, 주요 추진분야 및 항목을 제시

* PCD 추진에 대한 정책적 의지 표명방안, 주요정책 조정체계 등 검토

IV. 기관별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일정	소 관 (협조)
① ODA 전략 재정비			
①-1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분야 선정	'15.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①-2	중점협력국 조정	'14.下	국조실·기재부·외교부
①-3	CPS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14.下	국조실 (기재부·외교부)
①-4	다자원조 종합전략 마련	'13.下	국조실 (기재부·외교부)
①-5	인도적 지원 종합전략 마련	'14.下	외교부
①-6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계획 수립	'13.下	국조실 기재부·외교부
② ODA 자원 확대 및 적정 배분			
②-1	고채무국에 대한 전문기관 공동진단	'14.下	기재부·EDCF
②-2	취약국 지원을 위한 EDCF 가이드라인 마련	'13.下	기재부·EDCF
②-3	최빈국 특성에 따른 유상원조 지원전략 마련	'14.下	기재부·EDCF
③ ODA 통합추진체계 관리 강화			
③-1	분야별 EDCF 분과위원회 설치	'14.下	기재부·EDCF
③-2	사업 2년전 예비검토제 도입	'13.下	국조실 기재부·외교부
③-3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시행	'13.下	국조실 (외교부)
③-4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14.下	각부처
③-5	ODA 평가 윤리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13.下	국조실
④ ODA 책무성 및 일관성 확보			
④-1	ODA 백서 발간	'13.下	국조실 (기재부·외교부)
④-2	ODA 종합홍보전략 수립	'14.上	국조실 (기재부·외교부)
④-3	정책일관성(PCD) 사례분석 및 시범과제 추진	'14.下	국조실 (각부처)

연번	권고사항
①	개발협력 전략체계에 중점분야(thematic focus areas)별로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목적·기대되는 결과 등을 명시
②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완성 및 개선
③	종합적인 다자원조전략 수립·공표
④	모든 원조사업과 유무상 지원에 걸쳐 양성평등·여성권한 강화·환경 및 기후 변화 등의 주류화를 위한 계획과 지침 강화
⑤	주요 관계자들(국회·시민사회·NGO·일반국민 등)에게 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제공
⑥	ODA 규모 증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강화
⑦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감독 하에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의제 수립
⑧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및 조율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정치적 역량 확보
⑨	대내외 정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 강화
⑩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증가율 유지 및 양·다자, 유·무상간 적정 균형 배분
⑪	취약국 및 고채무국에 대한 유·무상 비율을 신중히 진단하고, 유상원조 시 이들 수원국의 경제상황·재정구조 등을 고려
⑫	개발 목표와 수원국의 주인의식·선호·관리능력 및 수요를 반영한 원조 수단 선택
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획·예산 절차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강화
⑭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와 ODA 현지협의체의 기능 강화

연번	권고사항
⑮	총리실·기재부·외교부 및 양대 시행기관의 인적자원 강화
⑯	평가소위원회의 독립성과 평가절차 강화
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개선
⑱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조직에게 평가권한 위임
⑲	평가결과를 향후 추진사업에 체계적으로 환류
⑳	원조효과성 원칙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들을 모든 개발협력 전략과 원조관리 절차에 반영
㉑	성과가 저조한 부문(원조의 비구속화, 프로그램형 접근방식 확대, 원조의 중기 예측 가능성 제고, 개도국의 공공 재정관리체계 활용)의 집중 개선
㉒	2015년까지 전체 양자 ODA의 75%를 비구속화 한다는 공약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전환하여 추진
㉓	비구속성 원조를 최대화하기로 한 원조 비구속화 관련 DAC 권고, 아크라 행동 계획 및 부산 공약이행에 집중
㉔	기술협력을 포함한 모든 ODA의 구속화 현황 보고
㉕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전략 및 정책 수립
㉖	지원 대상·항목·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㉗	양자(현물) 지원이 가장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 장치 마련
㉘	지원결과 보고와 학습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실행

국가협력전략(12개국)

- 라오스, 모잠비크, 카메룬, 콜롬비아, 페루
 -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르완다, 우간다, 파라과이, 파키스탄
-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국가협력전략 추진 개요	45
II.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	47
III. 모잠비크 국가협력전략(CPS)	53
IV. 카메룬 국가협력전략(CPS)	59
V.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65
VI. 페루 국가협력전략(CPS)	71
VII. 나이지리아 국가협력전략(CPS)	77
VIII. 네팔 국가협력전략(CPS)	83
IX.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CPS)	89
X. 르완다 국가협력전략(CPS)	95
XI. 우간다 국가협력전략(CPS)	101
XII.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CPS)	107
XIII. 파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113

국가협력전략 추진 개요

- (추진배경) 우리의 대외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수립* 추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2항2호 및 「ODA 선진화 방안」('10.10.25, 제7차 국개위)은 중점협력국에 대해 CPS를 수립하도록 명시

- 기존에는 유·무상 기관별로 협력전략을 작성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 부재로 통합적인 ODA 정책 시행에 애로
- 중점협력국별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무상 원조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리의 비교우위를 조화시킨 전략문서를 수립

* CPS상 중점협력분야에 양자원조의 70% 이상 지원 원칙

- (진행상황) 26개 중점협력국 중 26개국에 대한 CPS 수립

- '11.8월(제11차) : 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3개국)
- '12.3월(제12차) : 볼리비아(1개국)
- '12.9월(제13차)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5개국)
- '12.12월(제14차) :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5개국)
- '13.8월(제16차) : 나이지리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르완다, 모잠비크, 우간다, 카메룬, 콜롬비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12개국)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

[요약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라오스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광물 수출과 인프라 건설 호조, 광공업 부문의 성장에 따라 '90년-'09년간 평균 연 6.5%의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 1인당 GNI 1,260불('12), 최빈국으로 분류
- 광물자원(주석, 납, 구리 등) 수출 호조와 건설업 성장, 관광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10년 7.9%, '11년 8.3%의 경제성장률 기록
- 라오스 경제구조는 농림업에서 천연자원 분야로 전환하는 추세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4.6억불 수준 유지
 - '07년 이후 ODA 수원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11년 ODA 비중은 GNI 대비 5.17%로 나타남
 - 상기 기간 동안 사회 및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경제 근간 인프라 및 무역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라오스 국가개발전략*)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의 균형 있는 성취를 통한 '15년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공적 달성 및 '20년 최빈국 지위 탈피

*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

- (주요목표) ①고속성장, 안정 및 지속성 ②농촌기초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 및 세계와 연결 ③거버넌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④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⑤국제사회로 편입 ⑥무역개방
- (평가) 보건 및 교육부문의 강화,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특별한 관심 필요

Ⅱ. 우리나라의 라오스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1.16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59억불(집행기준), 1.38억불(승인기준), 무상 : 0.57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교육, 보건 등을 주로 지원
- 협력대상국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
- ⇒ 향후 유·무상 연계,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라오스의 중기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라오스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

- 對라오스 지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지속가능성, 원조조화의 3대 가치를 추구

①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개선) 수자원 및 전력인프라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 기반 강화

- 수자원 관리 및 전력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② (인적자원개발) 중고등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 라오스 중·고등교육의 공평한 기회 확대,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교육기관 운영·관리 역량강화

③ (보건의료)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및 보건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MDG 달성 도모

-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지원, 보건인력 및 제도적 역량강화에 기여

III.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수자원, 전력,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에 지원
 - (조직) 현지 주재 인력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 및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공여국간 협의 체계 강화 노력 및 협의체 적극 참여
 - (민간과의 협력) NGO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라오스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모잠비크 국가협력전략(CPS)

[요약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모잠비크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노력, 각종 규제 완화, 민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연 7%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중

* 1인당 GNI 510불('12), 최빈국(LDC)으로 분류

- 산업별 GDP 기여도가 고르게 분포된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자원 등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노동인구의 약 80%가 종사하는 농수산업은 여전히 경제의 근간

- GDP 규모가 비슷한 주변국에 비해 열악한 기업환경(취약한 전력 수급·금융업·국제교역), 낮은 대외경쟁력 등이 지속적 성장을 위협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9.72억불 수원

- '11년 ODA비중은 GNI 대비 16%로 대외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
- 상기 기간 동안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보건·위생 분야의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모잠비크 국가개발전략*) 농촌중점개발을 근간으로 한 지속 가능하고 빈곤층을 포함하는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

* 모잠비크 정부의 5개년 계획(SFYP 2010-2014) 및 중기빈곤감소전략 PARP(Poverty Reduction Action Plan, 2011-2014)

- SFYP의 주요 목표: ①빈곤율 감소 ②연간 실질 GDP 성장률 8% 달성 ③남북 고속도로 완성 ④ 발전능력 증가 ⑤ 농촌 지역의 상수 공급률 증가
- PARP의 기본목표: ①농업과 수산업 분야 생산성 증가 및 생산량 확대 ②일자리(고용) 창출 ③인적·사회적 개발 추진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개선, 산업구조 다변화, 외채 의존도 축소, 사회 인프라 구축, 인적·금융부문 개선 등 필요

II. 우리나라의 모잠비크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09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05억불(집행기준), 1.92억불(승인기준), 무상 : 0.04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교통, 보건, 에너지, 농어촌개발, 통신 분야 등 지원
- 협력대상국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원조일치 및 효과성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

⇒ 향후 유·무상 연계,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모잠비크 정부 국가개발전략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빈곤친화적인 포괄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전력 및 교통, 농업발전, 인적자원개발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 ① (전력 및 교통 분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구축
 - 전력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연계된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역량강화 지원 등
- ② (농업발전) 빈곤 감소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농촌 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 농촌환경개선 및 농민 역량강화, 농업기술 향상 및 보급, 농업 정보화 지원
- ③ (인적자원개발) 지역 전 계층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기술직업 교육의 질적 향상 지원

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전력·교통, 농업발전, 인적자원개발)에 지원
 - (조직) 현지 주재 인력확충 및 현지 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 협의 강화, G-19 그룹 국가 및 이들 관련 협의체와 협력 방안 모색
 -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및 역량강화 추진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모잠비크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카메룬 국가협력전략(CPS)

[요약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카메룬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국제유가 상승세('05~'11) 및 산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 인프라 투자와 열악한 기업 환경에 따른 FDI 유입 부진 등으로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기록

* 1인당 GNI 1,170불('12년), 하위중소득국(LMIC)으로 분류

- 석유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농업 육성,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정책, 풍부한 상업적 광물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상승 예상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9.03억불 수준 유지

- '07년 이후 ODA 수원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11년 ODA 비중은 GNI 대비 2.5%로 '07년 대비 낮은 수준
- 그동안 경제·사회(교육, 보건) 인프라 및 부채탕감에 재원이 집중되었으나, '08년부터 부채탕감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총 ODA 규모도 감소

- (카메룬 국가개발전략*) 빈곤율 10% 이내 감소, 중소득국 및 산업국으로 도약하고 민주통합 및 국가통합을 실현하여 '35년까지 민주적이고 다양성이 결집된 신흥국가로 부흥

* 카메룬 비전 2035(Vision 2035)

- (주요목표) ①민주통합 실현 및 국가통합 강화 ②경제 성장 및 고용 ③사회·인구학적 문제 ④도시·지역개발 ⑤거버넌스
- (평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산업국 및 민주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장애요소의 해소 및 광물 자원 개발촉진을 통한 수출 품목의 다변화 필요

II. 우리나라의 카메룬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08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0.01억불(집행기준), 0.35억불(승인기준), 무상: 0.07억불 지원(집행기준)

- 그동안 공공행정, 보건, 농림수산, 교육 분야 등을 주로 지원
- 협력대상국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효과성은 일부 제고되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미흡
- ⇒ 향후 유·무상 연계 강화, 전문인력 확충,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활성화 필요

□ (향후 협력전략) 카메룬의 비전 2035, 성장 및 고용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사회·산업 인프라 개선, 농촌종합개발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기반 강화

- 직업훈련소 및 교사양성센터 건립, 교육훈련용 장비·기자재 지원, 전문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제공

② (사회·산업인프라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산업에너지시스템 및 공공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포괄적 성장 도모

- 의료 전달시스템 구축,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산업에너지 분야 전반의 기술 역량강화 및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전자화 지원

③ (농촌종합개발) 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개선 및 새마을운동을 통한 종합적인 지역개발

-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 신기술전수, 교육 연구단지 조성 및 새마을 운동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III.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인적자원개발, 사회·산업인프라 개선, 농촌종합개발)에 지원
 -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현지 사무소의 인력 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 확대 등의 역량 강화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 및 카메룬측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분야간·사업간 연계가능성 검토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의 강화, 공여기관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활성화
 -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 (성과관리) 카메룬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콜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요약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콜롬비아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09년 경제침체 이후 '10년에는 4.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절대빈곤계층의 비율이 '00년부터 '10년까지 17.6%에서 12.3%로 감소

* 1인당 GNI 6990불('12), 상위중소득국(UMIC)으로 분류

- 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유한 전통적인 농업 기반 국가
- '10.11월 콜롬비아 정부는 향후 4년간('10.8-'14.8) 국가개발을 위해 추진할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ND)을 발표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9.72억불 수원

- '07-'11년간 연평균 ODA 비중은 GNI 대비 0.38%로서 ODA 의존도는 매우 낮음
- 상기 기간 동안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통합 및 포괄적 성장의 관점에서 교육, 보건 등 사회 부문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의 국가개발전략*) 고용창출, 빈곤감소 및 치안강화를 통해 전 국민을 위한 번영 도모

* Prosperidad para Todos 2010-2014

- (주요목표) ①통합 및 지역개발 ②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쟁력 강화 ③기회균등 ④평화의 공고화 ⑤혁신 ⑥환경지속성 ⑦굿거버넌스 ⑧국제사회 편입
- (평가) 중장기적으로 인적자원개발, 효율적인 행정제도,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시스템 구축 등 필요

Ⅱ.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년-‘11년간 총 0.18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없음(집행기준), 0.4억불(승인기준), 무상: 0.18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ICT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농업 등을 주로 지원
 -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미흡
- ⇒ 향후 유·무상 연계, 민자 유치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콜롬비아의 국가개발전략(Prosperity for All, 2010-2014)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 콜롬비아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성, 지속가능성, 원조조화 및 원조일치의 원칙에 따른 지원을 실시

① (농촌지역개발) 생산성 향상, 수확량 증대, 소득원 다양화에 기여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빈곤퇴치 프로그램 지원

②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인적역량강화) 중점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정보화 역량강화, 인적자원 역량강화

- 과학기술 및 혁신 도모, 인적자원 양성, 전력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다양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③ (공공행정) ICT를 활용한 행정제도 구축 및 정부의 치안강화

- ICT를 활용한 행정제도 개선 기반 마련,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및 정부의 치안강화 지원

III.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농촌지역개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인적역량강화, 공공행정)에 지원
 - (조직) 현지 주재 인력확충,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프로그램 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 및 콜롬비아측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분야간·사업간 연계가능성 검토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공여국간 협의 체계 강화 노력 및 협의체 적극 참여
 -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등 연계 추진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콜롬비아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페루 국가협력전략(CPS)

[요약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페루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페루 경제는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 증가,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최근 10년간('02-'12) 평균 6.4%의 경제성장을 달성

* 1인당 GNI 5,880불('12),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

-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 증가에 따라 페루의 외채상환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
- 페루는 남미의 자원부국이며 풍부한 농림 수산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음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약 3.31억불 수원

- '11년 ODA 비중은 GNI 대비 0.35%로 의존도는 매우 낮음
- 그동안 교육, 수자원·위생 등 사회인프라 분야에 비교적 재원이 집중되었으며 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

- (페루 국가개발전략*) 인적자원개발, 지역간 균형발전, 생산성 증가에 대한 투자를 통해 '21년까지 국가의 빈곤 및 절대 빈곤을 10% 이하로 감소

* Bicentenary Plan: Peru in 2021

- (주요목표) ①국민의 인권과 존엄성 ②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③지위 및 거버넌스 ④경쟁력과 고용 ⑤지역개발과 인프라 ⑥천연자원 및 환경
- (평가) 페루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공여국의 지원을 선호하며,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의 프로그램화, 평가 및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

Ⅱ. 우리나라의 페루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년-‘11년간 총 0.39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없음, 무상 : 0.39억불(집행기준)

- 빈곤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보건의료체계구축, 농업생산성 향상과 ICT 인프라 개선 및 전자정부에 지원

⇒ 향후 우리측의 후보사업리스트 공유를 통한 연계성 제고, 통합적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필요

□ (향후 협력전략) 페루의 국가개발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① (보건의료)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농촌과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양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포함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
- 전국민 건강보험(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및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구축·개선 지원

② (농촌지역개발)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및 빈곤감소에 기여

-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진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및 사회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포용 정책에 기여

③ (정보통신) ICT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토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통해 페루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강화

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보건의료, 농촌지역개발, 정보통신)에 지원
 - (조직) 현지 주재 인력확충 및 현지 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 및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약 강화, 공여기관간 정기협약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활성화 등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페루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나이지리아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나이지리아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원유 매장량을 지니고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 이권과 관련한 테러, 종족-종교 갈등 등의 정세불안을 겪고 있음

* 1인당 GNI 1,430불('12), 하위중소득국(LMIC)으로 분류

- 농업과 원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매우 편중된 산업 구조

* 농업과 원유·가스산업은 GDP의 40%이상을 차지하며 나이지리아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 역할

- 종족·종교 갈등,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실질적 경제성장 및 지속적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력개발 및 효율적 정부 운영과 관계된 다각적 접근과 지원이 필요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18억불 수원

- '11년 ODA 비중은 GNI 대비 0.85%로 감소추세

- 경제성장 및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인프라 강화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나이지리아 국가개발전략*) '20년까지 세계 거대 경제권 20위 진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핵심 우선순위로서 ①굿거버넌스, ②인프라, ③인적역량강화를 설정

* VISION 20:2020은 1차(2010-2013), 2차(2014-2017), 3차(2018-2020)의 단계별 이행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복지와 생산성 보장, 경제성장의 핵심요소 최적화, 지속적인 사회경제 개발 장려를 포함하여 20대 경제국으로서의 나이지리아를 현실화하고자 함

- (평가)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기 핵심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개발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II.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11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없음, 무상 : 0.11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농림수산, 보건환경 및 의료분야 등을 주로 지원
 - 나이지리아의 주요 우선순위인 '생산영역 강화'와 '인적·사회개발', MDGs, 취약국 지원원칙을 고려하여 농업과 보건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단일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등은 미흡
- ⇒ 향후 치안 상황을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타 공여국과의 협력추진, 유·무상 및 사업간 연계 강화등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나이지리아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 ① (인적자원개발)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 성장을 통해 개발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 기초교육 관련 인프라 확충, 정책개발 지원, 교사 및 정책결정자의 역량강화 지원 등
 - 기술직업훈련과 관련한 인프라 확충, 훈련과정 개선 및 제도 정비,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등
- ② (공공행정) 국가의 핵심기능 강화를 통한 장기적 분쟁방지 유도
 - 전자정부 초기단계 지원을 위한 제반 정책자문, 기술협력 제공 등

III.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인적자원개발, 공공행정)에 지원
 -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현지사무소의 인력 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등 역량강화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 및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약 강화, 공여기관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활성화 등
 -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등 연계 추진
- (성과관리) 나이지리아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네팔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계부처 합동

I. 네팔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06년 내전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및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경제 성장 추세 저조

* 1인당 GNI 700불('12), 최빈국(LDC)으로 분류

- 농업·서비스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구조, 만성적인 전력 및 연료 부족, 사회간접자본 미비, 숙련 인력 부족 등이 경제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난 20년간 빈곤 관련 지표 현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사회 계층 및 소득 수준, 지역·성별간 개발격차가 커 균형 발전 및 소외계층의 사회적 포용이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약 8.5억불 수원

- '11년 ODA비중은 GNI 대비 4.7%로 대외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
- 상기 기간 동안 사회 및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보건 분야의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네팔 국가개발전략*) '번영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구현을 통한 최빈개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도약'을 목표

* 3개년 개발계획(Three Year Plan 2010/11-2012/13)

- (주요목표) ① 경제 성장 기반 강화, ② 사회기반 시설 강화, ③ 포용적이고 형평적인 개발, ④ 경제·사회 서비스 강화, ⑤ 굿거버넌스 ⑥민간 부문 육성 및 산업·무역 활성화 추진 등*

* 네팔정부는 국가기획위원회 주관으로 3개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3년 하반기 중 차기 3개년 개발 계획 공식 발표예정

- (평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네팔 국내 정치 안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필요

II. 우리나라의 네팔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70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37억불(집행기준), 0.46억불(승인기준), 무상 : 0.33억불(집행기준)

- 상기 기간 동안 산업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등을 주로 지원
- 최빈국인 네팔의 상황과 개발우선순위를 고려, 경제기반 강화 및 공공서비스접근성 확대 분야를 중점 지원

⇒ 열악한 거버넌스 체계 및 불안정한 정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네팔 국가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농업, 에너지(전력)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인적자원개발) 경제성장 기반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기술직업교육훈련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수요 중심 교육훈련 과정 개발, 교사 훈련·역량강화를 통한 질적 개선

② (보건의료)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

- 기초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민 대상 보건 서비스 수요 증진, 보건의료 재정 시스템 구축 지원

③ (농업) 농업 역량강화 및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감소 기여

- 농업 기술 지원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한 농업 역량 강화, 새마을 운동에 기반한 농촌지역 종합개발

④ (에너지)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을 통한 균형적 경제 발전 기반 강화

- 인프라 개발조사 지원, 수력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개선을 통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정책 및 기술 전수를 통한 인적 역량강화

III.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 농업, 에너지)에 지원
 - (조직) 유·무상기관 현지 사무소의 전담인력 강화 및 유관 기관간 협력 활성화, 현지전문가 채용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 기관간 및 협력 대상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간 연계 강화, 개발 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 등 사업 구성 요소별 연계 강화
 - (원조일치) 네팔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되는 분야별 중장기 지원 전략 수립, 네팔국가시스템(재정관리 및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 현지 공여국 협의체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지역 협력체(SARRC*)와의 적극적인 협력 모색
- *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네팔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동티모르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동티모르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동티모르는 '02년 독립을 선포한 신생독립국으로 '04년 석유·가스개발 이후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수익의 재분배 체제가 미비하여 국민 절반이 빈곤선 아래 분포

* 1인당 GNI 3,670불('12), 최빈국(LDC)으로 분류

-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대외경제변화에 취약하고, 非석유분야 발전이 저조하여 국내 산업구조의 불균형 발전 문제 대두
- 또한, 정부의 취약한 행정력과 사회 전반적인 저개발 문제, 기초사회 인프라 및 기술인력 부족 등 다양한 개발문제 직면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3.02억불 수원

- 위 기간 연평균 ODA 비중은 GNI 대비 10.03%로서 ODA 의존도는 감소 추세
- 그동안 기타 사회분야에 지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상 차관 도입 등 경제 분야 지원 증가

-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로 진입, 극빈곤의 종결, 아세안 경제와 격차 감소, 민주주의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목표

* 동티모르 국가개발전략 2011-2030 (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 (주요목표) ① 사회적 자본 구축, ② 인프라 개발, ③ 경제 개발, ④ 제도적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과 전략적 산업육성, 인프라 건설과 민간부분 강화, 非석유 경제분야 다각화를 '30년까지 주요 목표로 함
- (평가) 위 목표 달성 및 개발과제 극복을 위해 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 기술인력 양성, 기초사회 인프라 구축 필요

Ⅱ. 우리나라의 동티모르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14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없음, 무상 : 0.14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보건과 교육 분야를 주로 지원
- 협력대상국의 개발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프로그램화된 지원 미흡
⇒ 향후 타 공여국과의 협력강화, 유·무상 및 사업간 연계, NGO와의 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접근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동티모르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교육·훈련, 보건의료,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

- ① (교육·훈련) 기초교육의 질 향상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하여 MDG 달성 및 경제성장 기반 구축
 - 기술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기술전수 지원, 기초교육과정 교재개발 및 보급 지원
- ② (보건의료) 모자보건 증진과 국가 질병관리 강화를 통하여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MDG 달성, 기초 보건수준 향상
 - 질병관리 표준지침 및 운영 역량강화, 질병관리 전달체계 강화, 모자보건 통합관리체계 및 보건요원양성 프로그램 지원
- ③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 식수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접근성 강화
 - 식수원 확보와 위생처리 인프라 구축, 식수원 종합관리 실행 계획 및 관리 역량강화, 기술전수 및 기술자 양성 지원
 - 국제기구와 협조유자를 통한 도로 확충 및 복구, 교통인프라 개발조사 및 기술지원, 개발 및 관리 전문가 양성

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교육·훈련, 보건의료, 기초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지원
 -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현지 사무소의 인력 확충 및 현지전문가 채용확대 등의 역량 강화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협력대상국과 긴밀한 협의와 현장에서부터 연계·조율된 ODA를 추진하여, 사업간 연계 및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원조효과 향상
 - (원조일치) 협력대상국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공공재정관리 및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양자협약 강화, 공여기관간 정기협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 참여, 취약국 지원 뉴딜이행을 위한 협의 및 사전준비
- (성과관리) 동티모르 정부와의 공동평가, 통합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르완다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르완다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경기부양 정책 및 해외원조의 안정적인 유입, 농업 생산성 증가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연평균 8.1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

* 1인당 GNI 570불('11), 최빈국(LDC)으로 분류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우호적인 기업 환경 등에 기반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12-'13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144개국 중 63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위를 차지

- 다만,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의 45%인바, 르완다 정부는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경제 기반 다양화 등을 목표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10억불 수원

- '11년 ODA 비중은 GNI 대비 20%로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동시에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 인프라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르완다 국가개발전략*) '20년까지 국가 통합 및 종합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신장하여 '20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6개 주요 목표** 설정

* VISION 2020

** ①굿거버넌스 및 능력 있는 국가 ②인적자원개발 및 지식 기반의 경제 ③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 ④사회기반시설 발전 ⑤생산성 있는 시장 중심의 농업 ⑥지역 및 국제 경제 통합

- (평가) 거시 경제 안정화 및 원조에 대한 의존 감소에 노력한 결과 VISION 2020의 세부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등 국가 발전의 틀 확립 중

II. 우리나라의 르완다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17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없음, 무상 : 0.17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 등을 주로 지원
- 우리의 비교우위 및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르완다 국가발전전략의 고려 및 타 공여국·기관과의 협력은 부족
- ⇒ 르완다와의 원조일치 및 개발 파트너들과의 원조조화 노력 필요

□ (향후 협력전략) 르완다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기술직업교육훈련 및 대학교육), ICT, 농업·농촌개발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 ① (인적자원개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
 - 기술직업교육훈련 시설 설립 및 지속적인 운영 지원, 교사 양성 센터 설립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 지원
- ② (ICT) ICT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ICT 전반에 걸친 발전 촉진
 - 전자 정부 시스템 확대 보급 및 공무원의 ICT 운영 역량 강화, ICT 혁신센터 건립 및 관련 기업 및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ICT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및 중장기 자문 제공
- ③ (농업·농촌개발) 농촌 지역 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빈곤 감소에 기여
 - 농업 기반시설 구축, 영농기술센터 건립, 농업 기술 보급 및 농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농촌 지도 역량 강화 지원

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ICT)에 지원
 -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유·무상 기관 현지사무소의 역량 강화, 사무소간 협력 활성화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패키지형(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을 연계) 지원 실시
 - (원조일치) 국가개발계획(VISION 2020, EDPRSII)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PFM 및 공공조달시스템, DPAF 등) 활용
 - (원조조화) 원조분업(DoL) 정책을 바탕으로 주요 공여국과의 조화 및 개발파트너조화그룹(DPCG)과의 협의 강화 등
 -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르완다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우간다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우간다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안정적 거시경제 구축 노력과 구조조정 기반의 경제체제 개혁 및 민간부문 개혁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연평균 6.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

* 1인당 GNI 440불('12), 최빈국(LDC)으로 분류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석유 매장량 등에 기반한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최근 Lake Albert 부근에서 약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이 발굴됨

- 다만, 하루 2불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의 24.5%인바, 우간다 정부는 국가발전 및 빈곤퇴치를 위해 기술력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17억불 수원

- '11년 ODA 비중은 GNI 대비 9.62%로 감소 추세
- 경제성장 및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인프라 강화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간다 국가개발계획*) 우간다를 30년 내에 번영하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초기성장 부문, 보완적 부문, 사회적 부문, 제반 환경 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쳐 8대 주요 목표** 설정

* National Development Plan

** ①가계 소득 증대 및 형평성 증대 ②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인 일자리
이용 가능성 증대 ③경제 인프라의 양과 질 향상 ④질적 사회 서비스의 증대
⑤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기술, 혁신 및 ICT 장려 ⑥인적자원개발 강화 ⑦
거버넌스, 방위, 안보 강화 ⑧지속 가능한 인구와 환경 및 천연 자원 활용 촉진

- (평가) 균형적인 국가 발전 및 빈곤 격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해외 원조의 투명한 운용이 요구됨

II. 우리나라의 우간다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078억불 지원(승인 및 집행기준)

* 유상 : 없음(집행 기준), 0.003억불(승인 기준), 무상 : 0.075억불(집행기준)

- 그동안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분야 등을 주로 지원
- 우간다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업 간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는 부족
- ⇒ 유·무상 연계, 지원기관간 협력 등의 내부적 원조 조화가 필요

□ (향후 협력전략) 우간다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농업·농촌개발, ICT, 경제인프라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농업·농촌개발) 향상된 농업 인프라 및 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촉진

- 농산물 가공 시설 및 농업 지도자 연수원 설립 지원, 수확 후 관리 시스템 확충 및 관련 기술 보급 지원

② (ICT) ICT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ICT 전반에 걸친 발전 촉진

- 국가 주요 ICT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액션 플랜 수립 지원, ICT 세부 분야별 제도 및 정책 구축, 대학 및 관련 연구 기관의 ICT 분야 실무자 역량 강화 지원

③ (경제인프라) 도로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균형적 국가 발전 지원

- 도로망 구축을 위한 개발 조사, 유전개발 지역 및 인접국을 중심으로 도로 건설 사업 지원

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농업·농촌개발, ICT, 경제인프라)에 지원
 - (조직) 현장 중심의 ODA 추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유·무상 기관 현지사무소의 역량 강화, 사무소간 협력 활성화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패키지형(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을 연계) 지원 실시
 - (원조일치) 우간다 국가개발계획(VISION 2040, NDP)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국가시스템(PFM 및 PPDA 등) 활용 제고 등
 - (원조조화) 공여국·기관 그룹(LDPG)과의 협의 강화, 분야별 파트너 그룹(SWG) 회의 및 신탁기금(trust fund) 참여 활성화
 - (민간과의 협력) NGO·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PPP) 시범사업 발굴·시행, 수출금융 등과의 연계 추진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우간다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파라과이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파라과이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산림자원 및 조림개발 잠재력 풍부하나, 전반적인 빈곤과 소득 불균형 상황 지속

* 1인당 GNI 3,290불('12), 하위중소득국(LMIC)으로 분류

- 불충분한 산업인프라 보유, 연관 산업 미발달, 기후조건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실질적인 빈곤감소 미달성, 농촌지역에 빈곤인구 집중, 도시 외곽의 빈곤인구증가 추세 등이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

- (ODA 수원현황) '07년 이후 확대추세로서, '10-'11년간 1억불규모

- GNI 대비 ODA 비중은 약 1%이하로 대외원조 의존도는 낮은 편
- 최근 주요 지원 분야는 물과 보건, 제도적 역량 강화, 교육이며, 크게 제도적·사회적·경제적 역량강화가 목표

- (파라과이 국가개발전략) 모든 파라과이 국민의 사회개발을 위한 공공정책(PPDS, 2010~2020) 및 경제·사회전략(PEES, 2008-2013)으로 구성

- (주요목표) ①국민의 기초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②극빈층의 불균형 완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실시, ③시민참여와 부의 분배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추구, ④정부 및 공공부문의 제도적 역량강화 및 효율성 추구
- (평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 경제 측면에서 성장과 안정을 이루었으나, 소외계층의 빈부격차와 소득 불균형 지속

Ⅱ. 우리나라의 파라과이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34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0034억불(집행기준), 없음(승인기준), 무상 : 0.34억불(집행기준)

- 상기 기간 동안 보건의료, 교육, ICT 마스터플랜 및 교통 분야 지원
- 파라과이의 개발과제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및 프로그램화된 지원은 미흡

⇒ 향후 유관기관간 협력 및 사업간 연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강화, 민간참여 기반 확충 등이 필요

□ (향후 협력전략) 파라과이 개발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기초사회서비스, 불균형 완화, 운송시스템 개선을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

① (기초사회서비스) 국민의 기초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모자보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프로그램에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량, 교육, 보건에 대한 권리실현 및 삶의 질 개선

② (불균형 완화) 취약 계층의 역량 제고 및 생산성 향상

- 소농 대상 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 지원, 소득창출을 위한 농산물 다양화, 중소농민 기술지원, 관련분야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③ (운송시스템 개선)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과 경제발전 환경 조성

- 도로운영 관리시스템, 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 분야 기술지원 및 공공서비스 전달 역량 등 공공행정 현대화 부문 인적 역량 강화

Ⅲ.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이상을 중점협력 분야(기초사회서비스, 불균형 완화, 운송시스템 개선)에 지원
 - (조직) 유·무상기관 현지사무소의 전담인력 강화 및 유관 기관간 협력 활성화, 현지전문가 채용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파라과이 정부 및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간 연계 강화 및 개발조사·프로젝트·기술 지원 등 사업 구성 요소별 연계 강화
 - (원조일치) 파라과이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되는 분야별 중장기 지원 전략 수립, 파라과이 국가시스템(재정관리 및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주제별 기금, 공여 기관간 회의 참여 활성화 등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파라과이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파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요약 본]

2013. 8. 23.

관 계 부 처 합 동

I. 파키스탄의 경제·개발환경 및 국가개발전략

- (경제·개발환경) '01년 이후 6-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대규모 홍수발생('10) 및 전력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대로 경제성장률 하락

* 1인당 GNI 1,260불('12), 하위중소득국(LMIC)으로 분류

- 풍부한 저임 노동력 및 석탄·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그러나 불안한 국내외 정치 상황과 열악한 거버넌스, 인프라 부족,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만성적 요소로 작용

- (ODA 수원현황) '07-'11년간 연평균 29억불 수원

- 최근 5년간 인도주의적 분야의 수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기타 사회분야, 교육, 보건 분야 순으로 지원이 집중
- ODA 수원 규모는 '08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약한 경제기반과 역내 안보측면에서의 지정학적 입지를 감안하였을 때 당분간 현 수원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파키스탄 국가개발전략*) '지식기반의 자원집약적인 경제로의 발전을 통한 정의롭고 번영하는 선진국가로의 도약' 추구

* 경제성장 프레임워크(FEG) 및 제10차 5개년 계획(2010-2015)

- (주요목표) 경제성장 프레임 워크는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해 ①생산성 개선, ②거버넌스 개선, ③혁신(경제개방), ④시장 육성 ⑤도시 관리 ⑥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강화 등 주요 항목별 세부목표 수립*

* 제10차 5개년 계획(2010-2015)은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부족 해소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개선 등을 포함한 14개 전략목표 설정

- (평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정치 상황 안정과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정부 행정역량 강화 필요

Ⅱ. 우리나라의 파키스탄 지원현황 및 향후 협력전략

□ (지원현황) '07-‘11년간 총 0.38억불 지원(집행기준)

* 유상 : 0.19억불(집행기준), 1.3억불(승인기준), 무상 : 0.19억불 (집행기준)

- 상기 기간 중 산업에너지,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이 약 73%
- 파키스탄의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생산성 개선을 주로 지원해왔으나 사업간 연계 측면은 미흡

⇒ 불안한 대내외 정치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확대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향후 협력전략) 파키스탄 국가 개발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에너지, 인적자원개발, 식수·보건 분야를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① (산업에너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강화

-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지원, 도로 확장 및 개선, 도로 교통 연구 기관 역량강화
- 인프라 개발 조사 지원, 전력 보급률 향상을 위한 발전 설비 확충 및 송배전망 개선, 에너지 분야 인적 역량강화 지원

② (인적자원개발) 기술·혁신 역량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섬유, 농·축산, ICT 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 기술직업교육훈련기관 시설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및 수요 중심 교육 과정 개발 등을 통한 기술직업교육훈련 질적 제고

③ (식수보건) 식수위생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향상

- 식수 공급 및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시스템 관리 역량강화, 공공인식 개선 활동 지원
-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 지역정부의 보건 프로그램 지원, 보건 의료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체계강화

III. 이행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

- (향후 지원계획) '13-'15년간 양자원조의 70% 이상을 중점협력 분야(산업에너지, 인적자원개발, 식수·보건)에 지원
 -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 확충, 현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ODA 추진
 - (원조효과 제고) 사업간 연계, 원조일치·조화 노력 지속
 - (사업간 연계)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국내기관간 및 협력 대상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간 연계 강화, 개발 조사·프로젝트·기술지원 등 사업 구성 요소별 연계 강화
 - (원조일치) 중점협력분야 중심으로 파키스탄 국가개발계획에 연계되는 지원 강화, 파키스탄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 시스템 등) 활용 제고
 - (원조조화) 중점협력분야별 주요워킹그룹 및 공여국 협의체 적극 참여, 지역 협력체(SARRC*)와의 협력방안 모색
- *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성과관리) 통합모니터링, 파키스탄 정부와의 공동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도모
 - (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중점협력분야별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위험요인 관리
 - (평가) 사업 기관·주제별로 평가, 중점협력분야의 경우 '결과 평가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 현황 측정
 - ('14년) CPS 이행 중간 점검 ⇒ 전략 수정 및 목표 재정립
 - ('15년) 관계기관 합동 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차기 CPS에 반영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2013. 8. 23.

국무조정실

목 차

I.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123
II. ODA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및 개선방안 ...	130
III. ODA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 2차 시범사업 계획 ...	133
IV.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	137

I. ODA 협의채널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

- (배경) 시행기관 - 재외공관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해 수원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 (목적) 가이드라인은 시행기관과 재외공관간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ODA 협의채널 구축 도모

2.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가이드라인은 시행기관 - 재외공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상호준거로서 기능
 - (시행기관) 사업수행 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사업발굴 초기단계부터 재외공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
 - 특히, 수원국 방문시에는 방문계획 및 결과를 재외공관과 공유
 - (재외공관) 시행기관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관련 정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
 - 특히, ODA 관련 현지 회의결과를 시행기관과 공유
- 가이드라인은 변화하는 현장 여건 및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 보완

*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일수는 1주일 미만의 경우, 근무일수를 의미

3.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 (적용주체) 가이드라인은 OECD/DAC에서 지정한 수원국에 소재하는 재외공관 및 국내 ODA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 (적용업무) ODA 사업 또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시 적용하며, 단순 국제협력 업무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제3조제2항제2호)
- 국가 등은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제5조제1항)
-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 등 사업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9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上 관계 조항>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발굴 단계

□ 수원국 방문

- 시행기관은 사업발굴 또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수원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재외공관에 방문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결과를 공유
 - (사전공지) 가급적 수원국 방문 최소 2주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3일 이내에 재외공관에 통보
 - * 방문계획 · 일정,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
 - (결과공유) 가급적 귀국 후 2주 이내에 방문 결과*를 정리하여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1주 이내에 재외공관에 전달
 - * 면담자,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 재외공관은 시행기관이 외교부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 사항 적극 지원

□ 재외공관의 의견제시

- 재외공관은 시행기관이 발굴한 사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의견제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재외공관은 공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련 시행기관에 송부
- 시행기관은 재외공관의 의견을 향후 사업추진시 충분히 참고
 - (검토의견)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외교부에 송부, 외교부는 이를 1주 이내에 재외공관에 전달

□ 현지 ODA 정보 공유

- (현지 회의정보) 재외공관은 ODA 관련 현지 회의결과를 가급적 회의종료 후 1주 이내에 관련 시행기관과 공유하고,
 - 현지에서 개최될 국제회의·포럼 등에 대한 개최정보를 수시로 시행기관과 공유

* 현지 ODA 협의체, 공여국 협의체, 기타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회의

- (수원국 요청사업) 재외공관은 수원국의 공식 요청사업 발생시 외교부에 알리고, 외교부는 이를 가급적 2주 이내에 시행기관과 공유

□ 사업계획 공유

-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차년도 시행계획안이 확정 되면, 1개월 이내에 시행계획을 국별로 정리하여 재외공관에 송부

2.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

□ 수원국 방문

- 시행기관은 수원국 정부와의 현지 협의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의 과정에 재외공관을 참여시키고,
 - 현지 협의결과 주요 진척사항은 재외공관과 공유
- 재외공관은 시행기관이 외교부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 사항 적극 지원

□ 재외공관의 의견제시

- 재외공관은 연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해당국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수행과정에서 애로 또는 문제 발생시 관련 시행기관에 통보

* 의견제시 방식은 사업발굴단계와 동일

- 시행기관은 재외공관의 의견을 향후 사업추진시 충분히 참고

* 이 경우, 재외공관에 검토의견 송부 불요

3. 사업평가 단계

□ 수원국 방문

-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의 소위평가를 위해 평가팀이 수원국을 방문하는 경우, 원활한 평가 수행을 위해 재외공관에 협조 요청
 - * 협조요청 방식은 사업발굴단계와 동일
- 재외공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팀의 현지 출장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활동 적극 지원
 - * 자체평가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 재외공관의 의견제시

-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견서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송부
- 평가팀은 평가과정에서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
 - * 이 경우, 재외공관에 검토의견 송부 불요

3 가이드라인 이행담보 방안

□ 재외공관장 평가에 반영

-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평가에 ODA 협조 및 정보제공 실적 등을 반영하되, 평가시 시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및 「ODA 통합평가」

- 필요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및 「ODA 통합평가」를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 점검·평가

□ ODA 시행계획 조정시 고려

- ODA 시행계획 조정시 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불이익 조치 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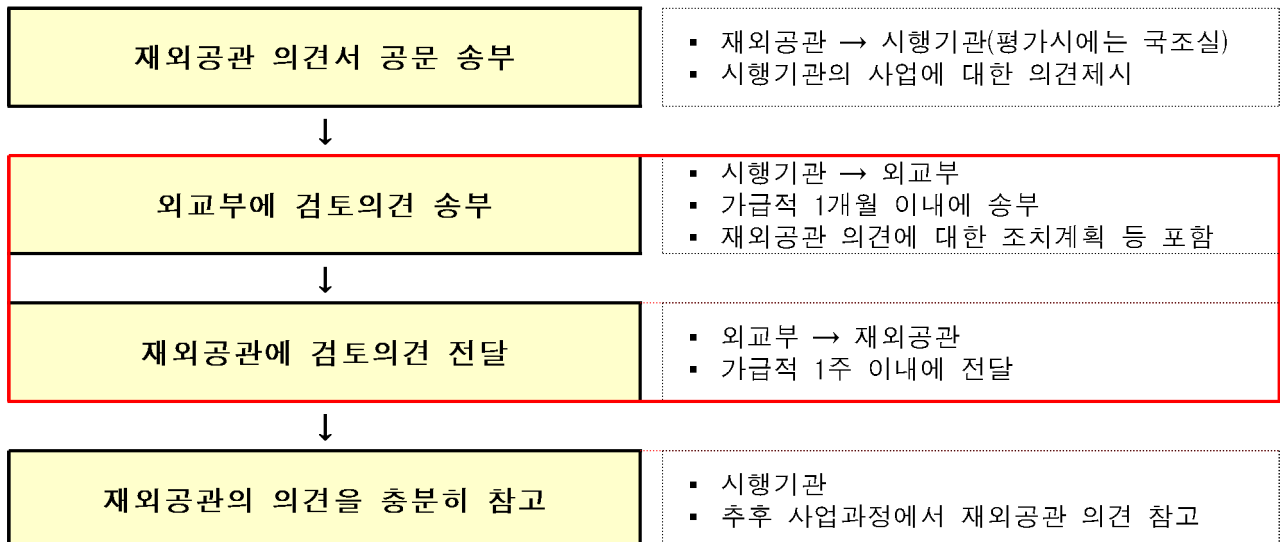
□ 수원국 방문을 위해 협조요청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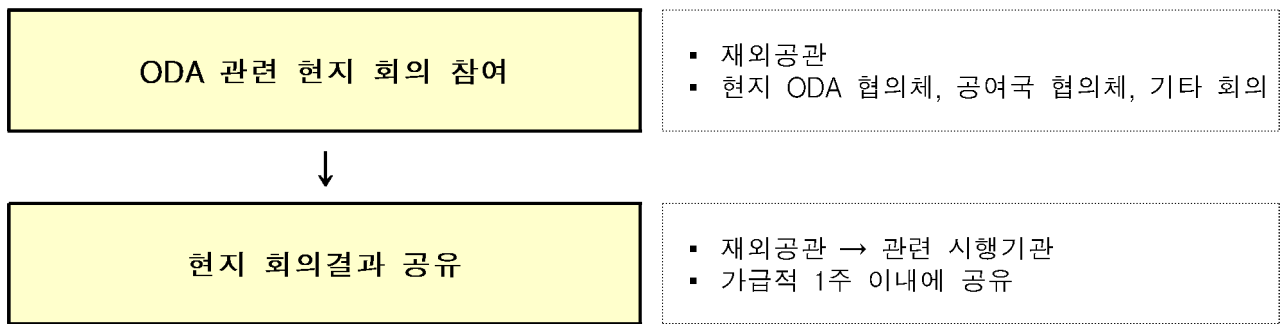
□ 수원국 방문결과를 공유하는 경우



□ 재외공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 □ 부분은 사업발굴단계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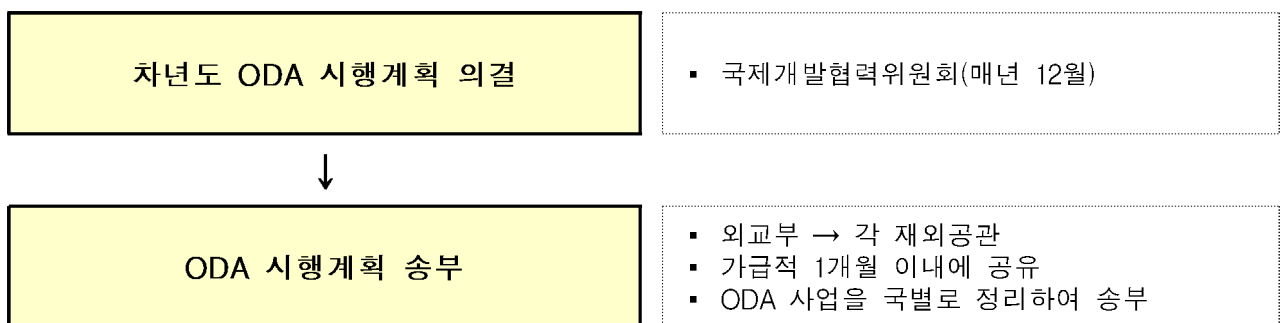
□ ODA 관련 현지 회의결과를 공유하는 경우



□ 수원국 공식 요청사업을 공유하는 경우



□ 차년도 사업계획을 재외공관과 공유하는 경우



Ⅱ. ODA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및 개선방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 국개위는 ODA사업간 중복방지, 연계사업 발굴, 정보공유 확대 등을 위해, 사업추진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할 것을 의결('11.12)
- 이에 따라 ODA 통계기관(수출입은행)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 전년도 실적을 연 2회 입력하는 기존 통계보고 시스템과 달리, 당해연도 실적을 주기적으로 입력하고, 사업진행정보도 추가 입력

항 목	모니터링 시스템	통계보고 시스템
운영목적	사업정보공유, 진도관리	ODA 관련통계 제출
입력대상	당해연도 실적	전년도 실적
입력시점	3, 7, 11월	2, 6월
주요내용	사업진행단계, 연계사업	사업명, 원조규모

- '12년의 경우 42개 정부부처·기관이 총 3회에 걸쳐, 총 1,516건의 ODA 사업에 대한 사업정보 및 관련 통계를 입력

	ODA 모니터링 시스템			통계보고 시스템
	1회(3월)	2회(7월)	3회(11월)	6월
기관수(개)	40	42	42	44
사업건수(건)	1,222	1,411	1,516	1,468
집행액(백만불)	225	663	1,006	1,812

* 모니터링시스템과 통계시스템의 차이는 입력시기, 대상사업 등의 차이로 발생

- (성과)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집행실적 등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입력·관리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적시성 제고
 - 시스템을 통해 원조유형, 사업내용, 타당성조사 결과 등 다양한 사업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강화에 기여
 - 사업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발굴, 집행 등 단계별 사업 평가·관리체제 기반 마련
- (미흡한 점) 입력 시기·항목 등이 기존 통계보고시스템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두 시스템간 실적치에 불일치 발생
 - 모니터링시스템의 입력시기가 3·7·11월로 설정되어 연도 말에 집행된 사업이 최종 실적치에서 누락
 - * 기존 통계보고시스템의 경우 2월에 전년도 실적치 전체를 일괄하여 입력
 - 시행초기의 편의를 위해 개발협력행정비용, 봉사단파견 등 일부 사업을 모니터링 시스템 입력대상에서 제외
 - 예산 집행정보 이외에 타당성조사결과, 사업별 성과지표 등 사업관련 실적 정보에 대한 입력이 부족
 - * 사업발굴·F/S 관련정보는 전체사업의 0.8%, 성과관리지표는 24.3%만 입력
 -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상황
 - * '13.7 실시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실적 입력, 단순 정보 조회가 이용실적의 71.4%를 차지
 - 담당자의 잦은 교체, 사용자 친화적인 매뉴얼 부족으로 입력 오류 등 비효율 발생

3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향

- 입력시기 · 대상사업 등을 조정하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강화
 - 현행 연 3회(3·7·11월) 입력방식을 분기별(1·4·7·10월) 입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기별 중점입력항목을 명확히 규정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입력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4분기 실적 ▪ 당해연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실적 ▪ 전년도 결산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실적 ▪ 사업예산안
▪ 신규사업정보, 사업발굴 정보				

- 입력대상 사업을 기존 통계보고시스템과 일치하도록 재조정
- 사업설명서, 예산요구서, 타당성조사결과, 시행계획서 등 입력 정보를 다양화하여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ODA 사업에 대한 발굴 · 집행 · 평가 등 단계별 관리를 강화
-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의 매뉴얼 개발
 - 정기 · 수시 교육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스템의 기능과 활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

4 향후계획

- '13년 하반기중 시스템 개편, 매뉴얼 개발, 사용자 교육 · 홍보 완료
- '14년 1/4분기부터 개편된 시스템 운용
 - '14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ODA모니터링시스템과 통계 보고 시스템의 통합운영방안 검토

Ⅲ. ODA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 2차 시범사업 계획

1 추진배경 및 경과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사업의 타당성·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ODA 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하기로 결정('11.12, 제11차)

* 대규모 국내재정사업에 대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대형 ODA사업에 대해 예산 신청 이전 제3의 기관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

- 이에 따라 국조실은 「ODA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분석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KIEP)과 유·무상 ODA 사업시행기관을 공동시범사업시행자*로 선정

* (유상 ODA사업) KIEP + EDCF / (무상 ODA사업) KIEP + KOICA

- 시범사업 첫해인 '12년의 경우 유·무상사업 각 1개, 총 2개 사업에 대해 1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사업명	조사기간	예산
유상	베트남 남딘성 팅롱교량건설사업	3개월 (2012.12.18~2013.3.20)	1억원 (KIEP 5,000만원 EDCF 5,000만원)
무상	볼리비아 베니주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	4개월 (2012.7.16~11.15)	1억원 (KIEP 5,000만원 KOICA 5,000만원)

- '13년의 경우 예비타당성제도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

- 시범사업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2차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설정

2 1차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결과

1. 베트남 남딘성 교량건설사업

① 사업 개요

- (지역현황) 남딘성은 72km에 이르는 해안선과 다오강 등 4개 강이 지역내에 있어 높은 해양산업 및 환경자원 개발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할 해안도로가 미비한 상황
- (사업내용) 남딘성의 해안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량과 연결도로 건설을 지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계획 일정	추정 사업비
베트남 남딘성 팅롱교량건설사업	○ 나이홍현과 하이하우현을 연결하는 팅롱교량(829m) 건설 ○ 교량에 대한 접근도로(1.8km) 건설	2014년 착공 2016년 완공	4,872만 ~5,624만달러

② 타당성 분석 결과

- 적정규모예측을 위해 베트남(안)과 우리측(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대안 모두 B/C가 1.0 이상으로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구 분	사업비용(USD)	B/C	NPV (10,000 USD)
베트남(안)	56,248,469	1.097	254.2
우리측(안)	48,712,938	1.272	616.2

③ 종합의견 및 F/S 과업지시

- (종합의견) 우리업체가 건설중인 남딘성 화력발전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예상되는 토지보상비·물가상승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
- (F/S과업지시) 이 지역의 잦은 자연재해와 연약한 지반에 대비한 개량된 공법과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2. 볼리비아 베니주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

① 사업 개요

- (지역현황) 베니주 지역은 46만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고립·낙후로 인해 3차 의료기관이 부재
- (사업내용) 3차 병원을 건설하고 설비를 지원하며, 보건 네트워크와 관리시스템을 강화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계획 일정	추정 사업비
베니주 보건의료시스템 향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병원 건설 ○ 보건시스템 강화 	'14년 1월 ~ '17년 12월	1,500만 달러

② 타당성 분석 결과

- 적정규모예측을 위해 100 병상규모(대안1)와 150 병상규모(대안2)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안 모두 B/C 값이 1.0이상으로 양호

구 분	사업비용(USD)	B/C	NPV (10,000 USD)
대안1 (100병상)	11,922,070	1.25	233.1
대안2 (150병상)	15,398,117	1.27	321.6

③ 종합의견 및 F/S 과업지시

- (종합의견) 현지 보건의료체계*를 활용한 교육·훈련 등 보건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할 필요

* 베니주자치대학(UAB)의 공중보건학 프로그램 및 범미보건기구(PAHO) 등을 활용
- 필요시 의료기기·기자재 사업을 EDCF 소액차관 사업으로 보완

- (F/S과업지시) 편차가 큰 현지 업체의 공사비 단가 등 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과, 수원국의 행정절차와 실행계획 등을 분석한 Work Flow를 작성

1 기본방향

- 1차 시범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무상 각1개, 총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 아울러 총 4개 사업(1차 2회, 2차 2회)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효과분석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연구 병행

* 총예산 2.1억 : 2개 시범사업에 1.1억, 기본연구에 1억원 배정

2 주요 연구내용

- (기본연구) 시범사업 효과분석, 주요국의 운용현황, 최적모형, 관련법령 개정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

〈 주요 연구 방향 〉

- ▶ 4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 ▶ 주요국, 국제기구의 예비타당성제도 운용현황
- ▶ ODA 예비타당성제도가 우리나라의 ODA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 ▶ 대상사업 기준금액, 면제대상사업 등 최적모형 개발
- ▶ 조사 전문기관 역량강화 방안
- ▶ 필요시 근거법령 제정안 등

- (시범사업) 유·무상 ODA 사업 집행기관(EDCF, KOICA) 등으로 부터 후보사업을 제출받아 필요성이 높은 2개 사업에 대해 실시

* 기본연구와 시범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발주단계부터 연계추진

3 향후 추진일정

- '13년 하반기 : 연구용역 추진
 - '14년 상반기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 수립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

IV.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

1 이행점검 개요

1. 추진배경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실시**(직전 이행점검은 '13.1월 실시)
-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ODA 성격상 의결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이행점검을 통해 ODA 기관간 협업 촉진

2. 점검대상 및 방법

- (점검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월)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중 **이행시한이 '13.1~6월인 과제**(총 14건)
- (점검방법) '13.6월말 기준으로 기관별 **이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국조실에서 「완료, 지연」 등 이행현황 확인·점검

<의결사항 이행점검과제 목록 : 총 14건>

연번	과제명	소관기관	이행시한
(1)	◦ 잔여 12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기재부·외교부	'13.6월
(2)	◦ ODA 협의채널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
(3)	◦ ODA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수요조사	EDCF·KOICA	"
(4)	◦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	외교부	"
(5)	◦ 개발협력 평가전문가 Pool 마련	국조실	"
(6)	◦ 농림수산 분야 ODA 발전방안 수립	외교부·농식품부	"
(7)	◦ WFK 통합시행 로드맵 및 통합평가틀 마련	외교부	"
(8)	◦ WFK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외교부	'13.3월
(9)	◦ Peer Review 종합 개선추진 방안 마련	국조실·기재부·외교부	'13.6월
(10)	◦ '12년 자체평가결과 환류계획 제출	기재부·외교부	'13.3월
(11)	◦ 민관협력 T/F 구성	국조실	'13.2월
(12)	◦ 청소년 대상 ODA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KOICA	'13.6월
(13)	◦ 모자보건 ODA 통합추진전략 수립	외교부·복지부	"
(14)	◦ 개발컨설팅 ODA 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외교부	"

총 평

- ◆ 총 14개 점검과제 중 10개 과제는 이행완료, 4개 과제는 이행지연
- ◆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부처간 협의를 도출하여 의결사항 이행 추진
- ◆ 기타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시한을 연장하여 하반기 중 이행완료 추진

1. 완료과제 현황 : 10개 과제

연번	과 제 명	추진성과
(1)	◦ 잔여 12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 라오스, 모잠비크 등 12개국에 대한 CPS 수립 완료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예정
(2)	◦ ODA 협의채널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관계기관 회의 3회, 서면의견수렴 7회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예정
(3)	◦ 개발협력 평가전문가 Pool 마련	☞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전문가 Pool 마련 완료 ☞ 추후 모든 ODA 시행기관과 공유할 예정
(4)	◦ 농림수산 분야 ODA 발전방안 수립	☞ 관계기관 협의 4회, 전문가 의견수렴 4회 ☞ 관계기관 MOU 체결 및 「국제농업협력 발전방안」 마련
(5)	◦ WFK 브랜드 인지도 제고방안 마련	☞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지침 확정 및 공유 ☞ 브랜드 교육 강화 및 홍보 채널 다양화 추진
(6)	◦ Peer Review 종합 개선추진 방안 마련	☞ Peer Review 후속조치 T/F를 통해 개선방안 논의 ☞ 제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예정
(7)	◦ '12년 자체평가결과 환류계획 제출	☞ 자체평가 환류계획 제출 완료('13.4월) ☞ 기재부 25건, 외교부 12건의 환류과제 채택
(8)	◦ 민관협력 T/F 구성	☞ 민관협력 T/F 구성 완료('13.3월) ☞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EDCF, KOICA, 민간(4명) 참여
(9)	◦ 청소년 대상 ODA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13.2월) ☞ ODA 홍보 T/F를 통해 청소년 교육 교재개발 등 논의
(10)	◦ 개발컨설팅 ODA 사업 관련 개선방안 마련	☞ 기재부·외교부 실무 T/F 구성('12.12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컨설팅 개선방안 마련

2. 지연과제 분석 : 4개 과제

(1) 모자보건 ODA 「통합추진전략」 수립 (외교부·복지부)

- (과제내용) '13.6월까지 비교우위에 따른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 ODA 통합추진전략」 수립
- (추진현황) 직전 이행점검 이후, 양 기관간 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 도출 난항
- (지연사유) 외교부·복지부간 역할분담 범위에 대한 의견대립
- (조치계획)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과제임을 감안, 국조실 주제 T/F를 통해 「모자보건 ODA 통합추진전략」 마련('13.12월)

* 필요시, '13년도 소위평가 과제인 「보건분야 ODA 종합평가」 결과 활용

(2) ODA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수요조사 (EDCF·KOICA)

- (과제내용) '13.6월까지 「ODA 전문인력 수급전망 및 양성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수요조사' 실시
- (추진현황) 소관 기관별로 'ODA 청년인턴 수요조사', 'ODA 교육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의결사항 이행은 미흡
- (지연사유) 'ODA 전문인력 양성현황 및 수요조사 실시' 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의 이해 및 인지 부족
- (조치계획)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ODA 전문인력 양성현황을 조사하고 ODA 현장 중심으로 전문인력 수요조사 실시('13.12월)

(3)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 (외교부)

- (과제내용) '13.6월까지 부처간 초청연수 사업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
- (추진현황)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초안을 마련('12.12월)하고,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13.4월)시 초청연수사업 중복 조정
- (지연사유) '13년도 소위평가 과제인 「초청연수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이 바람직
- (조치계획) 「초청연수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하에 「초청연수 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13.12월)

(4) WFK 통합시행 로드맵 및 통합평가틀 마련 (외교부)

- (과제내용) '13.6월까지 '12년 소위평가 과제인 「WFK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WFK 통합 로드맵 및 평가틀 마련
- (추진현황) 관계기관간 통합시행 로드맵 및 평가틀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로드맵 및 통합평가틀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지연사유) 로드맵 초안 협의를 위한 무상원조협의회 봉사분과 협의회 개최 지연, 통합평가틀 마련 용역업체 선정 지연 등
- (조치계획) 로드맵 및 통합평가틀 마련을 조속히 추진('13.12월)

3 향후계획

- 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지연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월별로 이행상황 점검
- 제4차 이행점검 실시
 -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점검대상 과제를 사전 공지('13.9월)
 - '13.12월까지 완료가 예정된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14.1월)

